

01. ⑤ 02. ① 03. ① 04. ② 05. ② 06. ④ 07. ③ 08. ② 09. ④ 10. ⑤
 11. ④ 12. ④ 13. ③ 14. ③ 15. ③ 16. ⑤ 17. ② 18. ② 19. ① 20. ②

1.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정답 해설 : 정치를 바라보는 값의 관점은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⑤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국가의 정치 현상과 국가 이외의 다양한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정치 현상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본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정치를 국가만의 고유한 현상으로 보기 때문에 국가라는 정치 주체에 국한하여 정치의 의미를 규정한다.
- ②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비해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 ③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모두 국가가 국가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과정을 정치로 본다.
- ④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국가 수준의 정치 현상만을 정치로 보기 때문에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2. 법치주의의 유형 이해

정답 해설 : 법치주의의 유형 중 A는 실질적 법치주의, B는 형식적 법치주의이다. ① 실질적 법치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의 내용이 실질적 정의에 합치되도록 적정할 것을 강조한다. 즉, 실질적 법치주의는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는 모두 법의 보호라는 형법의 보호적 기능을 인정한다.
- ③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부합해야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이 가능해진다고 보므로 입법자의 자의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률의 실체적 내용이 아닌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해 입법자에 의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을 간과한다.
- ④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률의 내용이 헌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위헌 법률 심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⑤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는 모두 법률에 근거해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3. 기본권의 유형 이해

정답 해설 : 기본권 유형 중 국가 권력에 의해 침해되지 않음으로써 보장되는 소극적

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A는 자유권, 국가의 적극적 급부와 배려를 통해 비로소 보장되며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B는 사회권이다. ① 자유권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더라도 보장되는 포괄적 권리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 기관의 형성에 참여하거나 국가 기관의 구성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권리이다.
- ③ 자유권, 사회권은 모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이다.
- ④ 사회권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권리이다.
- ⑤ 청구권은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의 권리이다.

4.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

정답 해설 :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중 A는 국민 주권주의, B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② 복지 국가의 원리는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위하여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국제 평화주의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하는 근거가 된다.
- ③ 국민 주권주의의 실현 방안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위한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을 들 수 있다.
- ④ 국민 주권주의, 복지 국가의 원리는 모두 헌법의 이념적 기초로서 법률 제정과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 ⑤ 복지 국가의 원리는 현대 복지 국가 헌법에서부터 강조된 원리이다.

5. 전형적인 정부 형태의 특징 이해

정답 해설 : 갑국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 을국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②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는 동일인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의원 내각제에서는 행정부가 입법부에 정치적 책임을 진다.
- ③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 의원은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 ④ 대통령제에서 행정부와 입법부 간 엄격한 권력 분립이 이루어진다.
- ⑤ 의원 내각제와 달리 대통령제에서는 국민이 직접 행정부 수반을 선출한다.

6. 주민 참여 제도 이해

정답 해설 : 주민 참여 제도 중 (가)는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제도, (나)는 주민 투표 제도, (다)는 주민 소환 제도이다. ㄴ. 주민 소환 제도는 지방 자치 단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지방 자치 단체장과 지방 의회 의원(비례 대표 지방 의회 의원 제외)을 임기 중에 주민의 투표에 의하여 해임하는 제도이다. ㄷ.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제도와 주민 투표 제도 모두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 주

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ㄱ.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주민이 조례안을 청구하면 지방 의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ㄷ. 주민 투표 제도, 주민 소환 제도는 모두 주민이 지방 자치 단체장의 권한 행사를 견제하는 제도이다.

7. 형사 제재의 유형 이해

정답 해설 : 형사 제재 중 행위자가 저지른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부과되는 A는 형벌, 행위자의 장래 위험성에 근거하여 형벌을 대체 또는 보완하여 부과되는 B는 보안 처분이다. ㄱ. 형벌에 해당하는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 교정 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지만 정해진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다. ㄴ.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보안 처분에 해당하는 보호 관찰이 부과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ㄷ. 형벌, 보안 처분은 모두 부과 요건이나 절차 등에 있어서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8. 우리나라 헌법 기관의 이해

정답 해설 : 우리나라 헌법 기관 중 A는 대통령, B는 국회, C는 대법원, D는 국무총리, E는 대법관, F는 헌법 재판소이다. ② 국회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 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대통령은 국회에 임시회 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국정 감사는 국회의 권한이다.
- ③ 대통령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이루어진다.
- ④ 국무총리는 국무 회의의 부의장으로 국회 의원을 겸직할 수 있다.
- ⑤ 대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9. 법원과 헌법 재판소의 권한 이해

정답 해설 : A는 2심 법원, B는 헌법 재판소, (가)는 위헌 법률 심판, (나)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④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재판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경우 재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이다. 따라서 법원이 직권으로 헌법 재판소에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2심 법원은 1심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을 심판한다.
- ② 헌법 재판소는 해당 법률 조항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모두 충족된다고 판단하였다. 즉,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헌법 재판소의 결정으로 갑의 배출 시설에 대한 폐쇄 명령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③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⑤ 위헌 법률 심판,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은 모두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이루어진다.

10. 근로자의 권리 구제 절차 이해

정답 해설 : ⑤ 노동 위원회를 거치는 구제 절차와는 별도로 갑은 을을 상대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갑뿐만 아니라 △△ 기업 노동조합도 ○○ 지방 노동 위원회의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절차에서 신청인이 될 수 있다.

② ○○ 지방 노동 위원회는 갑에 대한 해고는 쟁의 행위 참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즉, ○○ 지방 노동 위원회는 갑에 대한 해고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③ 중앙 노동 위원회가 ○○ 지방 노동 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한다면, 갑에 대한 해고가 부당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부당 노동 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판정한 것이다.

④ 중앙 노동 위원회가 갑의 재심 신청을 기각한다면, 갑은 재심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1. 민법의 기본 원칙 이해

정답 해설 : 민법의 기본 원칙 중 A는 계약 자유의 원칙, B는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다. ㄱ. 법률관계 형성에 있어 당사자가 자유롭고 평등한 주체라는 것을 전제로 성립된 원칙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ㄷ.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에 따르면이라도 개인의 사유 재산제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ㄴ.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건물의 신축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에 근거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ㄴ. 최저 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근로 계약 중 최저 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을 무효로 하는 것은 계약 공정의 원칙에 근거한다.

12. 범죄의 성립 요건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위법성 조각 사유 중 정당 행위, (나)는 위법성 조각 사유 중 정당 방위, (다)는 책임 조각 사유 중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 (라)는 책임 조각 사유 중 심신 상실자의 행위, (마)는 책임 조각 사유 중 강요된 행위에 해당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건이므로 무죄이다. ④ 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법적 비난 가능성이라고도

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법원은 갑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다.
- ② 법원은 을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다.
- ③ 변호인은 병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였다.
- ⑤ 변호인은 무의 행위가 책임 조각 사유 중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13. 특수 불법 행위 이해

정답 해설 : ③ 갑은 을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관 파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갑이 세탁 시설 피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을은 갑에게 공작물인 수도관의 소유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갑과 B가 양복 세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갑은 B에게 양복 변색에 따른 피해에 대해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② 을은 갑에게 수도관 수리를 약속하였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따라서 을은 갑에게 수도관 수리 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 ④ 병이 B에게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 갑은 B에게 법정 감독 의무자로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 ⑤ A의 부상에 대해 갑이 A에게 공작물의 점유자 책임을 지면 을은 A에게 공작물의 소유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14. 미성년자의 계약 이해

정답 해설 : ③ 병이 추인하면 정은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며, 병이 추인하지 않으면 정은 계약 체결 당시 B가 미성년자임을 알았으므로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용돈으로 게임기를 구매하는 것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으므로 갑은 A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A의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② 권리만을 얻는 법률 행위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첨된 고가의 자전거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갑 또는 병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 ④ 갑은 B를 입양하지 않았으므로 갑과 B 간에는 친자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정은 갑에게 B와의 매매 계약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⑤ 정과 B의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확정된 경우에는 병이 계약 체결자가 아니므로 정에게 자전거 매매 대금의 지급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15. 가족 관계 이해

정답 해설 : ③ 갑은 B를 입양하지 않았으므로 갑과 B 간에는 친자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갑이 사망한 경우 B는 갑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협의상 이혼의 효력은 행정 기관에 이혼 신고를 한 때에 발생한다.
- ② 병이 A를 친양자로 입양한 후에는 을과 A 간의 친자 관계는 종료되므로 을에게는 A에 대한 면접 교섭권이 없다.
- ④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할 경우 가정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 ⑤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하면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16. 정치 참여 집단 이해

정답 해설 : 정치 참여 집단 중 A는 이익 집단, B는 정당, C는 시민 단체, D는 언론이다. ⑤ 정당은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언론과 달리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이익 집단, 정당은 모두 정치 과정에서 투입 기능을 한다.
- ② 정당은 시민 단체와 달리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 ③ 이익 집단, 시민 단체는 모두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 ④ 이익 집단, 정당, 언론은 모두 정치 사회화 기능을 한다.

17. 형사 절차 이해

정답 해설 : ② 구속 적부 심사는 기소 전에 청구할 수 있다. 기소 후 공판 중에는 불구속 재판을 위해 보석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검사가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갑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 ③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생명 또는 신체상 피해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파손된 차량 유리창과 같은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는 범죄 피해자 구조를 청구할 수 없다.
- ④ 집행 유예는 형이 확정된 후 유예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 ⑤ 배상 명령은 가해자에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18.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정답 해설 :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갑의 관점은 현실주의적 관점, 을의 관점은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② 국제 분쟁의 해결을 위해 국가 간 협력과 공동 대응을 강조하는 것은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개별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국제 규범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 ③ 현실주의적 관점은 자유주의적 관점과 달리 국제 관계를 설명할 때 힘의 논리에 초점을 맞춘다.
- ④ 자유주의적 관점은 현실주의적 관점과 달리 국제 평화 실현을 위해 국제기구의 역할을 중요시한다.
- ⑤ 자유주의적 관점, 현실주의적 관점은 모두 국제 사회에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강제력 있는 중앙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19. 국제법의 법원(法源) 이해

정답 해설 : 국제법의 법원(法源) 중 A는 국제 관습법, B는 조약이다. ① 우리나라에서 국제 관습법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에 해당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개인은 국가, 국제기구와 달리 조약의 체결 당사자가 될 수 없다.
- ③ 국제기구는 국가와 달리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할 수 없다.
- ④ 국제 관습법은 원칙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모든 국가에 대해 보편적 효력을 가진다.
- ⑤ 조약은 국제 관습법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비준이 있어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 선거 제도 분석

정답 해설 : ㄱ.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 제도 개편안에는 선거구 간 인구 편차의 허용 기준을 현재의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수 기준 '상하 33% 인구 편차'에서 '상하 20% 인구 편차'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선거구 간 인구 격차를 줄여 선거구 간 '표의 등가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볼 수 있다. ㄴ. 갑국의 개편안 적용 시 대통령 선거에서는 유효 투표 총수의 과반의 표를 얻은 경우에 당선된다. 유효 투표 총수의 과반은 투표자 중 유효 투표 총수의 과반을 의미하는데, 유효 투표 총수는 투표율이 100%가 아닐 경우에는 전체 유권자 수보다 적다. 따라서 전체 유권자 과반의 표를 얻지 못한 후보자도 당선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ㄴ.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 제도 개편안에서 선거구당 4명씩 선출하고 각 정당은 선거구별로 최대 2명까지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다. 따라서 한 정당이 모든 선거구에서 2명씩 당선시키면 40명이 되어 의회 의석의 50%를 차지할 수 있다.
ㄷ. 갑국 의회 의원 선거 제도 개편안의 선거구제는 선거구당 4명씩 선출하므로 중·대선거구제이다. 우리나라 지역구 광역 의회 의원 선거의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이다.